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18
2014. 7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2014.6.1~6.30)

건축문화 부문

- 한옥 등 건축자산, 문화시대의 첨병으로 육성!
- 대구시, '제9기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 개강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체적 도시계획에 대한 건축 방안마련
- 서울시, 도시민박업 · 한옥체험업 700개소로 늘린다
- DDP 개관 100일, '시민 4명 중 1명' 246만 명 발길
- 건축문화 선진화, 공급 위주에서 문화 · 관광자산으로
- 도시건축시민투어, 부산남항일대 원도심 역사성 재조명
- 전국 최초, 부산에서 도시건축분야 전문 해설사 양성
- 대전시, '도시디자인포럼' 개최
- 서울시, 소설가 김훈과 함께 한양도성 '성곽마을돌이'
- 건축 문화를 새롭게 책임질, 2014년 젊은 건축가 선정

녹색 건축·도시 부문

- 주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공원 대상지 20개소 확정
- 서울시, 8천 가구에 설치될 미니태양광 모델 6종 선정
- 환경부, 친환경 인테리어 주거 공간 만들기 지원
- 「2014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작품 공모
- 동남아 해외건설 수주, '시장별 맞춤형' 새 전략
- 민자 공원 개발, 쉽고 빠르게 추진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건축허가로 가능
- 녹지 ·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시설 증설 가능해져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정비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본격 시행
- 10개 도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한다
- 민영주택 소형주택 건설 · 공급 자율화
-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도시재생 롤 모델로 정착했다!
-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당정협의 개최
- 도시계획 변경제한 폐지된다
- '수요자 중심의 행복주택 건설 기준' 마련된다
- 마을만들기 사업, 지역주민의 전문성 높인다.
-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입주자가 알도록 표시 의무화
- 광주 도심 재생 활력 불어넣는다
- 전북도, 공모사업으로 국비 425억 원 확보

APU Story

부산시민공원(구 캠프 하야리아)



월간 건축도시정책동향

2014년 7월호 (통권 18호)

-
- 발 행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 발행일 : 2014. 7. 28
 - 발행인 : 제해성
 - I S S N : 2288-274X
 - 편집·인쇄 : 알래스카인디고(주)
 - 기 획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동 706-1호
 - 연락처 : 031-478-9845
 - 이메일 : kslee@auri.re.kr(이경신)
-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 5 이달의 정책 Highlights
- 6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건축문화 부문

- 8 한옥 등 건축자산, 문화시대의 첨병으로 육성
- 8 대구시, '제9기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 개강
- 9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체적 도시계획에 대한 건축 방안마련
- 10 서울시,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700개소로 늘린다
- 11 DDP 개관 100일, '시민 4명 중 1명' 246만 명 발길
- 12 건축문화 선진화, 공급 위주에서 문화·관광자산으로
- 13 도시건축시민투어, 부산남항일대 원도심 역사성 재조명
- 13 전국 최초, 부산에서 도시건축분야 전문 해설사 양성
- 14 대전시, '도시디자인포럼' 개최
- 14 서울시, 소설가 김훈과 함께 한양도성 '성곽마을돌이'
- 16 건축 문화를 새롭게 책임질, 2014년 젊은 건축가 선정

녹색건축·도시 부문

- 17 주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공원 대상지 20개소 확정
- 17 서울시, 8천 가구에 설치될 미니태양광 모델 6종 선정
- 18 환경부, 친환경 인테리어 주거 공간 만들기 지원
- 18 「2014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작품 공모
- 19 동남아 해외건설 수주, '시장별 맞춤형' 새 전략
- 20 민자 공원 개발, 쉽고 빠르게 추진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22 대전시, '경관상세계획 수립기준' 완화 시행한다
- 22 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건축허가로 가능
- 23 연천 옥계마을, 6월부터 생활환경복지마을로 조성
- 24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시설 증설 가능해져
- 24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정비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본격 시행
- 25 10개 도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한다
- 26 민영주택 소형주택 건설·공급 자율화
- 27 행복도시 건축물 품격 높인다... 상업용지에 국내최초 BA제도 도입
- 27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도시재생 롤 모델로 정착했다!
- 28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당정협의 개최
- 29 포천 등 5개 시·군 생활권 선도사업 국비 137억 원 확보
- 30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본격 추진
- 31 경남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본격 추진
- 31 난지물재생센터 '19년까지 주민 친화공간으로 탈바꿈

- 32 지역발전위, 2014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 32 마을만들기 사업, 지역주민의 전문성 높인다.
- 33 농촌 도시 원하는 일자리 연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
- 33 도시계획 변경제한 폐지된다
- 34 '수요자 중심의 행복주택 건설 기준' 마련된다
- 35 주민이 만들어가는 어촌마을 창조이야기
- 35 7월부터 '어린이집 등 기부하면 용적률 완화' 본격 적용
- 36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입주자가 알도록 표시 의무화
- 36 국토부,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공모에 나선다
- 37 '공간정보산업 선도할 핵심인재' 키운다
- 38 20호 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받는다
- 39 광주 도심 재생 활력 불는다
- 40 전북도, 공모사업으로 국비 425억 원 확보

APU Story

- 41 부산시민공원(구 캠프 하야리아)
-

이달의 정책 Highlights

건축문화 부문

2014년 6월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총 12건의 사업 및 시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 문화시대의 첨병으로 육성', '한옥설계 A부터 Z까지 책으로 발간' 등 한옥과 관련한 자료를 발표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는 '건축 문화를 새롭게 책임질 2014년 젊은 건축가 선정', '소설가 김훈과 함께 한양도성 성곽마을돌이', '건축문화 선진화 공급 위주에서 문화·관광자산으로' 등 신진 건축가 발굴·양성 및 건축문화 자산과 관련한 행사 소식과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녹색건축도시 부문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서울시에서 6건의 사업 및 시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공원 대상지 20개소 확정', '민자 공원 개발, 쉽고 빠르게 추진' 등 녹색생활공원 조성과 관련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2014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작품 공모'를 통해 녹색건축대전 개최 소식을 알렸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27건의 사업 및 시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시설 증설 가능해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정비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본격 시행' 등 건축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과 관련한 발표자료와 '층간 소음 등 아파트 성능 입주자가 알도록 표시 의무화' 등 주택성능 표시의무화에 관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밖에,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도시재생 롤 모델로 정착했다', '마을만들기 사업 지역주민의 전문성 높인다', '광주 도심 재생 활력 붙는다', '전북도, 공모사업으로 국비 425억 원 확보' 등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정책사업들을 중점 발표했다.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2014년 6월, 중앙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건축·도시 관련 주요 시책 및 사업 관련 발표자료는 45건이다. 이 중 23건(51.1%)이 중앙부처의 발표자료이며, 22건(48.9%)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발표자료인 것으로 정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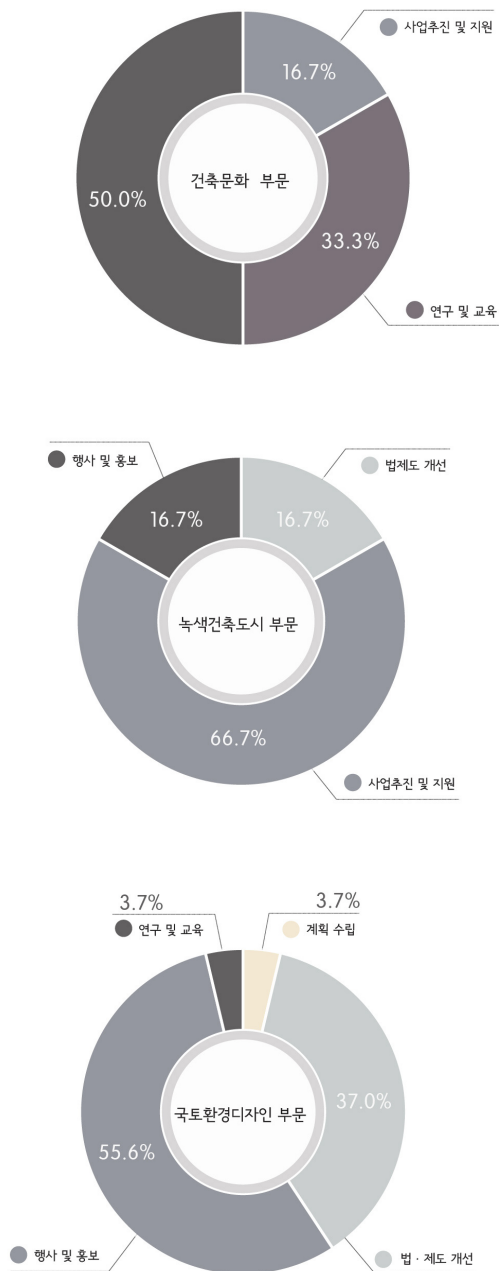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의 4개 중앙부처에서 발표한 자료 23건(60.0%) 중 중점 발표된 부문은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으로, 국토교통부가 19건(42.2%),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가 각각 1건(2.2%)의 정책 사업을 발표했다.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 2건(4.4%), 문화체육관광부 1건(2.2%)으로 총 3건(6.7%)의 정책 사업이 발표되었으며,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국토부에서만 4건

(8.9%)의 정책사업이 발표되었다.

서울시를 비롯한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자료 22건(48.9%) 중 12건(48.9%)은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서 서울특별시 외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문과 관련한 정책 사업을 발표했다.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경기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가 9건(20.0%)의 정책사업을 발표했으며,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가 1건의 건축도시관련 사업 및 시책에 대해 발표했다.

주관부처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 도시 부문	국토환경 디자인 부문	부문별 합계
국토교통부	2(4.4%)	4(8.9%)	13(28.9%)	19(42.2%)
문화체육관광부	1(2.2%)	—	—	1(2.2%)
해양수산부	—	—	1(2.2%)	1(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1(2.2%)	1(2.2%)
환경부	—	1(2.2%)	—	1(2.2%)
합계 (중앙부처)	3(6.7%)	5(11.1%)	15(33.3%)	23(51.1%)
강원도	—	—	1(2.2%)	1(2.2%)
경기도	1(2.2%)	—	2(4.4%)	3(6.7%)
경상남도	—	—	1(2.2%)	1(2.2%)
광주광역시	—	—	1(2.2%)	1(2.2%)
대구광역시	1(2.2%)	—	—	1(2.2%)
대전광역시	1(2.2%)	—	1(2.2%)	2(4.4%)
부산광역시	3(6.7%)	—	1(2.2%)	4(8.9%)
서울특별시	3(6.7%)	1(2.2%)	1(2.2%)	5(11.1%)
울산광역시	—	—	1(2.2%)	1(2.2%)
전라북도	—	—	1(2.2%)	1(2.2%)
제주특별자치도	—	—	1(2.2%)	1(2.2%)
충청북도	—	—	1(2.2%)	1(2.2%)
합계 (지방자치단체)	9(20.0%)	1(2.2%)	12(26.7%)	22(48.9%)
총 계	12(26.7%)	6(13.3%)	27(60.0%)	45(100%)

■ 주관부처별 정책동향



각 부문에 대한 세부분야별 동향으로, 6월 발표 자료 중 가장 중점 발표된 부문은 전체 발표자료 45건 중 27건(60.0%)의 정책사업이 발표된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이며,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에서 15건(33.3%), '법·제도 개선' 분야에서 10건(22.2%), '계획수립',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각각 1건(2.2%)의 정책사업이 발표되었다.

총 12건의 정책사업이 발표된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행사 및 홍보' 분야에서 6건(13.3%),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4건(8.9%),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에서 2건(4.4%)의 정책사업이 발표되었다.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에서 4건(8.9%), '법·제도 개선', '행사 및 홍보' 분야에서 각각 1건(2.2%)의 정책사업이 발표되었다.

6월 한 달간 가장 중점 발표된 분야는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와 '법·제도 개선' 분야로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는 21건(46.7%), '법·제도 개선' 분야는 11건(24.4%)의 정책 사업이 발표되었다. 그 다음으로 '행사 및 홍보' 분야 7건(15.6%), '연구 및 교육' 분야 5건(11.1%), '계획수립' 분야 1건(2.2%)의 정책 사업이 발표된 것으로 정리된다.

세부 분야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 도시부문	국토환경 디자인부문	분야별 합계
계획수립	—	—	1(2.2%)	1(2.2%)
법·제도 개선	—	1(2.2%)	10(22.2%)	11(24.4%)
사업추진 및 지원	2(4.4%)	4(8.9%)	15(33.3%)	21(46.7%)
시스템 구축	—	—	—	—
연구 및 교육	4(8.9%)	—	1(2.2%)	5(11.1%)
행사 및 홍보	6(13.3%)	1(2.2%)	—	7(15.6%)
총 합계	12(26.7%)	6(13.3%)	27(60.0%)	45(100%)

■ 세부분야별 정책동향

한옥 등 건축자산, 문화시대의 첨병으로 육성!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월 3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한옥을 비롯한 우리 고유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동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 우리 고유의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밖의 법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도 건축위원회 심의로 등록 결정된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중·개축 등 인허가시 관련 규제를 완화 적용하여, 현 법률 적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철거 등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일정 범위 내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 상·하수도 및 같은 기반시설 정비 지원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게 된다.

또한, 한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간 여타 건축물과 동일 잣대로 일률 적용해 온 건축법 관련 여러 조항들에 대해 한옥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한옥산업 전문 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정보구축 등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가가 적극 나서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여러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마련하여 법령의 본격 시행(15.6.)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자칫 멸실될 수 있는 우리의 한옥과 근대 건축자산을 품격 있는 국토경관의 소중한 자원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06.02.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대구시, '제9기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 개강

일반시민 대상,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분야 무료 강의

대구시는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전문 지식과 이해를 높이고, 도시재생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11일부터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을 시작한다.

대구시가 11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개강하는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 3.0 패러다임에도 맞는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이론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세무사·감정평가사 및 관계 전문공무원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기존 정비사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도시개발 관련 법률, 실무사례, 세무, 감정평가, 소송·판례 등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생활 속에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번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앞으로 7월 16일까지 6주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며, 모든 시간을 빠짐없이 이수한 수강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대구시가 2011년부터 개최해 온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그동안 8차례에 걸쳐 운영해 온 결과 주택정비구역 주민 및 일반시민, 학생,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천 7백여 명이 참가하여 900명 이상이 수료할 만큼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에도 계획인원(300명)이 일찍 마감되어 현재는 다음 기수 수강생 모집을 안내하고 있다.

9월에 운영할 예정인 제10기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 수강을 원하면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공지사항의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참고하거나, 대구시 도시재생과(803.3946)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 박영홍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성공의 열쇠”라며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과 토론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주민참여 활성화에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타 도시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 현장사진

2014.06.10.

..... 대구광역시 도시재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체적 도시계획에 대한 건축 방안마련

시민과 함께하는 ‘2014년 제1차 부산공간포럼’ 개최

부산시는 부산의 지역적 현안 문제해결과 상생의 도시공간회복

을 위해 6월 13일 오후 3시 30분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14년 제1차 부산공간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부산시와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가 주최하고 (사)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가 주관하며, ‘입체적 도시계획을 위한 건축 방안마련’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먼저 성은영 연구원(국가건축정책위원회 연구위원)이 ‘주민주도의 주거지 정비 및 관리의 시작-건축협정’에 대한 주제발표 및 부산의 지역적 환경 및 재개발 지역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건축적 대안에 대한 정보와 외국사례를 발표하고, 참석 패널 및 시민과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상생의 도시공간 회복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노후한 밀집주거지역내 재개발사업의 추진 상 발생하는 사업지연, 환경적·경제적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현행 건축법 적용의 특례제도를 토론한다.

소규모 부정형 대지¹ 상호간 건축협정 제도를 통해 개별필지별로 적용받던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폐율, 용적률 및 주차장과 조경시설을 맞벽건축이 가능한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실질적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주거지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의 획기적인 가능성을 알아본다.

부산시 관계자는 “각 계의 전문가 및 실무자들을 초청해 진행되는 이번 포럼을 통해 공동체의 건강한 회복과 힐링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진행되는 포럼에서도 부산시민의 필요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14.06.11.

..... 부산광역시 건축주택담당관실

¹ 소규모 부정형 대지 :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제한)에 저촉되는 토지(주거지역 60㎡이하)로서 대지의 형태가 정형화 되지 아니하여 건축이 부적합한 대지

서울시,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700개소로 늘린다

증가 추세 있는 개별여행객 겨냥한 매력적인 숙박상품 적극 마케팅

서울시가 여름철 관광성수기인 6~7월, 남은 빈방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임대하는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을 집중 홍보하는 기간으로 정해 사업설명회를 펼치는 등 올해 700개소까지 늘리기에 나선다.

'12년부터 시작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²은 현재('14년 5월말) 473개 업소, '09년부터 시작된 한옥체험업³은 79개 업소, 총 552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다.

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수에 비해 부족한 숙박시설을 대체하고, 은퇴자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대체숙박업 집중홍보는 주택보유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인지도와 투숙률을 높이기 위해 이뤄진다.

(19일(목) 14시 서울글로벌문화관광센터에서 시민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목) 14시 명동 서울글로벌문화관광센터에서 '대체숙박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제도 안내와 다양한 지원 내용 소개 및 신청방법을 안내하며, 실제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이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시간도 갖고, 전문 예약대행업체 상담 부스와 자치구 도시민박 담당자 상담 부스를 별도로 마련해 맞춤형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6월~12월까지 매월 1회, '대체숙박업 아카데미' 개최)

현재 운영자 및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마케팅 △세무 및 회계 △안전교육 △글로벌 에티켓 △기초 외국어 등을 무료로 알려주는 아카데미도 6월~12월까지 매월 1회, 마지막 주 월요일에 개최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7월~9월, 구글, 야후 등 주요 사이트에 서울시가 작년 7월부터 운영 중인 '대체숙박업 통합 예약·홍보사이트(stay.visitseoul.net)'를 소개하는 온라인 광고를 하며, 해외에서 개최되는 서울관광설명회, 관광교역전 서울홍보관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신규 창업자에 다양한 물품 지원해 대체숙박업 확충 유도)

서울시는 대체숙박업 확충을 위한 지원책으로 신규 창업자에게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의 안전물품 제공 △외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에 7개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 1년 이용료 및 통역전화기 제공 △간판제작비 지원 등의 물품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업주 간 모임을 지원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토록 하고, 대체숙박업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대체숙박업 지원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강태웅 서울시 관광정책관은 "거주 중인 주택의 빈방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일자리 창출과 공유경제 실현은 물론, 증가추세에 있는 개별여행객을 겨냥한 매력적인 숙박상품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신개념 숙박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게스트와 호스트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6.16.

.....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²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박 등을 제공하는 업. 외국인만 이용 가능.

³ '한옥체험업': 한옥에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내·외국인 모두 이용 가능.

DDP 개관 100일, '시민 4명 중 1명' 246만 명 발길

지난 3월 21일 문을 연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가 개관 100일 만에 하루 평균 2만8천여 명, 총 246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민 4명 중 1명이 다녀간 셈이다.

이는 시가 개관 당시 목표로 한 1일 평균 방문객 1만5천 명 보다 1만여 명(86%)이나 많은 수치로, 당초 올해 말로 예상했던 방문객 목표 550만 명을 10월이면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DDP 건물 자체가 세계 최대 규모 비정형 건축물이라는 점과 개관과 동시에 선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았던 '간송문화전', '자하하디드 360°전', '엔조앙리 디자인전' 등 각종 기획전시, '서울 패션위크', '무한도전 선택 2014', '별그대 특별전', '아트토이컬처', '컬투쇼 현장 생방송', '서울디지털포럼' 등 민간 창의자원과의 다양한 협업으로 이뤄진 다양한 전시와 행사가 시민들의 문화적 기대에 부응한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민, 주변 상인 기대감 높아)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71.2%는 DDP 개관이 동대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66.0%는 동대문 상권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동대문 상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에서 한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DDP 개관 전과 비교해 매출이 약 10% 상승했다”고 대답하고, 근처 음식점 상인 또한 “개관 시 주말 매출이 5~10%정도 상승했다”고 답했다.

또한 조사결과, 서울 시민(79.7%)과 동대문 상인(51.6%) 모두 'DDP가 창조적인 건축물'이라는데 동의한 비율도 높게 나타나 새로운 랜드마크로 활용될 수 있는 우수한 사회자원으로 평가됐다.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 마련)

아울러 서울시는 이러한 상승세를 가속화시켜 DDP를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월~9월 가족 나들이 시즌을 맞아 DDP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흑성탈출 무료시사회(6.30.), △간송전 2부 '보화각'(7.2.~9.28.), △유아놀이공간 'I Play Zone' 개장(7.10.), △트랜스포머 30주년 기념 특별전(7.17.~10.10.), △컬처 샵넬전(8.29.~10.5.) 등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DDP 세계적인 관광명소화 전략 '인천공항 환승객투어', '국내외 여행사 팸투어')

또, 인천공항 환승객을 대상으로 인천공항공사가 실시하는 '환승투어 서울문화코스'에 4월부터 DDP를 추가, 5월까지 총 30회 이상 운영해 총 660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DDP를 보고 갔으며, 지난 2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팸투어를 시작으로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과 진행한 방송 PD 및 작가 팸투어를 비롯, 국내외 여행업체, 구미주 해외여행 에이전시, 한국관광공사 일본 후쿠오카 지사 및 일본 여행사, 한류드라마 연계 중화권 언론사 등 지금까지 총 600여명이 참여한 27건의 팸투어를 추진했다.

(DDP 개관 후 주변 유동인구 증가로 종합적 교통체계 개선)

아울러 시는 개관 이후 지하철 2,4,5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이용객이 전년대비 20% 증가하는 등 주변 유동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DDP 개관 전후 4주간 교통흐름과 교통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DDP 주차장 입구 대형버스 주차면 증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교차로~동대문주차장교차로 구간 차량 속도 제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교차로 북측과 광희사거리 북측 유턴차로 신설 △동대문주차장 교차로, 누른 앞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으로 변경·운영 △보행량 많은 동대문주차장 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장충단로 밀리오레 앞 택시 승차대 증설,



승차대 이외 공간에 정차하는 택시들은 지속적 계도할 방침이다.

백종원 대표이사는 “DDP를 중심으로 동대문 창조경제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 공간적 연계·협력과 지역·산업간 융·복합을 하는 지역 상생프로젝트를 마련해 동대문을 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스페인의 빌바오, 영국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 효과를 뛰어넘는 DDP효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DP 야경

2014.06.29.

.....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

건축문화 선진화, 공급 위주에서 문화·관광자산으로

획일적인 건축물, 간판으로 도배된 상업건물에서 탈피해 장기적 관점의 건축정책을 토대로 건축문화 선진화를 이루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강식 연구위원은 <건축문화 선진화를 위한 공공정책의 방향>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급 위주의 건설정책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건축문화 정책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공공건축물은 기능적 요구에 충실한 획일적인 형태로, 문화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부족하다. 건축예산 절감, 에너지 고효율 등에 대한 건축정책에 비해 건축문화적 자산으로서의 계획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양식 또한 획일적이고 도시의 맥락과 연관이 없으며, 상업건물은 간판으로 도배돼 있어 민간건축의 질적 수준에 대한 자성이 대두되고 있다.

2008년 ‘건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및 광역단위의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고, 중앙정부 내 건축정책 전담조직이 신설돼 건축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건축문화 선진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강식 연구위원은 “건축문화 선진화를 위해 건축 및 도시환경을 문화자산과 관광자산으로 인식하는 건축정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장기적 시각에서의 건축정책 시행을 우선으로 꼽았다.

건축문화 선진화는 공공건축물의 질적 개선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건축물을 미래의 문화재화 하는 디자인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무관심 속에 소멸되어 가는 역사 및 근대 건축문화자산의 발굴 및 보존, 활용 정책을 추진할 것도 당부한다.

강식 연구위원은 끝으로 “건축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건축정책조직을 강화하고 전문공무원, 연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 측면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06.25.

..... 경기개발연구원 정보콘텐츠부



도시건축시민투어, 부산남항일대 원도심 역사성 재조명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 시민 40명 대상으로 '제2차 부산도시건축시민투어' 진행

부산시는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 주관으로 시민과 건축가가 함께 부산의 도시, 건축 곳곳을 탐방하는 '2014년도 제2차 부산도시건축시민투어(이하 건축투어)'를 6월 1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투어는 '바다내음 물씬한 시장건축투어'를 주제로 자갈치건어물시장과 남항동 창고 일대 건축물을 탐방한다.

자갈치시장 일대는 부산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부산항 개항 이후 1889년 일본인들이 자국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근 부산수산주식회사를 세우면서부터 근대화를 이루기 시작했다.

이에 물자운송과 선박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도개교인 영도대교가 개통됐고 6.25 한국전쟁 피란시절에는 영도대교 인근에서 이산가족을 기다리며 속을 태우는 사람들의 애환을 들어주는 점집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역사적인 흔적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남항 시장일대 도시건축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다른 관점으로 재조명 해보고자 한다.

도보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오전 10시 50분 △지하철 1호선 남포역 2번 출구 앞 집결을 시작으로 △자갈치 건어물 시장 △영도대교 점바치 골목 △영도대교 도개관람 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롯데백화점 옥상공원 전망대 △남항동 창고촌을 둘러보고, △부산의 맛이 어우러지는 부산삼진어묵체험역사관을 마지막으로 오후 3시경 모든 투어 일정이 마무리 된다.

투어해설은 근대건축의 역사를 전공한 홍순연 박사(상지건축사사무소 연구원)가 맡아 시장건축이 품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들려 줄 예정이다.

한편, 투어참가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6월 4일부터 11일 까지 선착순으로 40명을 모집했다.

2014.06.13.

..... 부산광역시 건축주택담당관실

전국 최초, 부산에서 도시건축분야 전문 해설사 양성 부산시, 부산국제건축문화제와 부산건축가회 주관으로 7월부터 두 달간 '부산건축문화해설사' 양성과정 참가자 20여 명 모집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이하 건축문화제)와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주관으로 '부산건축문화해설사 아카데미' 제1기 과정을 7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두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축문화해설사는 일반적인 관광문화해설사와 차별화돼, 총체적 문화자산으로서의 건축에 대한 바른 안목과 체계적인 식견을 갖추고 일반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부산건축문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도시·건축 분야의 전문해설사 양성은 부산이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과정으로 건축문화제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부산도시건축투어 인프라구축'사업의 하나이다.

이번 과정은 7월 2일에 개강해, 매주 월·수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에서 이론수업을 진행하고, 매주 토요일에는 현장위주 실습수업을 운영하게 된다.

프로그램에는 부산의 전통건축부터 현대건축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건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문화 해설사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기법에 대해서도 강의한다.

또한, 건축문화제에서 7개의 키워드(△해양건축 △연안건축 △센텀건축 △부산다운건축 △산복도로건축 △근대건축 △시장건축)로 개



발한 부산의 대표적 도시건축투어 코스에 대한 이론수업과 실습수업이 병행 될 예정이며, 과정은 총 100시간으로 9월 3일 마무리된다.

한편, 수강 신청은 도시·건축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외국어 가능자는 우대한다. 신청 기간은 6월 25일까지이며, 수강료는 10만 원(현장답사경비)이다.

신청 방법은 건축문화제 홈페이지 또는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biacf@naver.com) 또는 팩스(051.744.7730)로 제출하면 된다.

아카데미 운영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20여 명의 수강생을 최종 선발해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교육과정에 80% 이상 출석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실전 평가회에서 일정 성적 이상을 거둔 수강생에게는 '건축투어 문화해설사 인증서'를 발급해, 이후 건축문화제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도시건축시민투어'에 전문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부산시 광영식 건축주택담당관은 "건축문화 코스개발 및 지도제작과 함께 진행되는 전문해설사 양성을 통해 관광지에 편중되는 지역 관광산업의 범위를 도시와 건축문화 분야로까지 확대해 부산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면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요에 맞게 부산다운 건축을 소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6.20.

..... 부산광역시 건축주택담당관실

대전시, '도시디자인포럼' 개최 도시에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입히다

대전시는 26일 오후 2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전문가 및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도시에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입히다'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공공분야에서 서비스디자인의 도입과 활용방안에 대한 발표자의 강연 후 종합토론과 질의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더디엔에이 민영삼 대표가 「스마트시티와 서비스디자인」란 주제로 서비스디자인의 개념과 진행과정, 그리고 성공적인 서비스디자인 사례와 스마트시티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다음으로 안장원 이음파트너스디자인그룹 대표가 「장소브랜드화를 위한 도시 스토리텔링과 서비스디자인」이란 주제발표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의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도하는 디자인으로 다른 도시와 구분되는 차별화된 아이덴티티 정립에 대하여 설명하고 적용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정형화되고 획일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시민을 배려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06.25.

.....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과

서울시, 소설가 김훈과 함께 한양도성 '성곽마을돌이'

소설가 김훈 강연, 마을잔치, 성곽마을 둘러보기 등
25일(수) 첫 행사

서울시는 성곽마을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으며 '갈의 노래', '남한산성' 등의 저자인 우리나라 대표 소설가 김훈과 함께 성곽마을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주민, 마을활동가 등이 자유롭게 참여해 강연도 듣고 잔치도 여는 '성곽마을돌이'를 25일 연다.

시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한양도성 주변 22개 성곽마을의 가치와 가능성을 강의,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과 공유하는

‘성곽마을돌이’를 매달 한 번씩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시대부터 한양을 둘러싸고 도시를 지켜온 한양도성이 건던 세월동안 그 곁에서 함께 자라온 성곽마을은 역사 문화적 가치는 물론, 시민들의 삶이 녹아들어 있어 생활문화 유산으로서의 가능성도 두루 겸비하고 있다.

25일(수) 열리는 첫 ‘성곽마을돌이’ 행사는 18시 장수마을 도성마당에서 △사전공연 △소설가 김훈의 열린강연 △마을활동가들과의 담화 및 마을 잔치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열리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열린강연에서는 김훈 작가의 성곽마을에 대한 단상과 애착을 들어 보고 자유로운 담화를 통해 각 마을 활동가들이 전하는 숨겨진 마을 이야기와 일화도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 잔치에서는 성북구 주민 동아리 ‘바람소리’의 색소폰 공연이 펼쳐지고, 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특히 16시에는 ‘성곽마을 둘러보기(사전투어)’가 열린다.

소설가 김훈과 주민, 마을활동가 등 40~50명이 동대문 성곽공원 → 창신동 → 충신동 굴다리 → 이화동 벽화마을 → 낙산공원 → 이화마루 → 장수마을 → 도성마당 코스를 걸으며 특색 있는 각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김훈 작가는 “한양도성과 성곽마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 직접 시민들과 만나 성곽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흔쾌히 동참하게 됐다”며 “내 고향 서울은 만인의 타향이다. 그러므로 서울에 고향을 건설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뜨내기일 뿐이다. 서울 성곽을 걸으면서 나는 내 고향 서울이 만인의 고향으로 거듭 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을 지역 특성에 따라 9개 권역 22

개 성곽마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보전·관리 계획을 수립 중인 서울시는 도성 위주 또는 규제를 통한 보존이 아닌, 한양도성 보전과 함께 주거지 환경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서울시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과거의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은 한양도성의 보전을 위한 철거나 규제의 대상으로 여겨졌지만 앞으로는 주민들과 함께 역사문화와 주민들의 삶이 공존하는 특색 있는 마을로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매월 다양한 ‘성곽마을돌이’ 행사를 열어 주민·시민과 함께 성곽마을의 가치와 가능성을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성곽마을돌이 이동 동선

2014.06.23.

.....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과

건축 문화를 새롭게 책임질, 2014년 젊은 건축가 선정

2014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기간 중 시상·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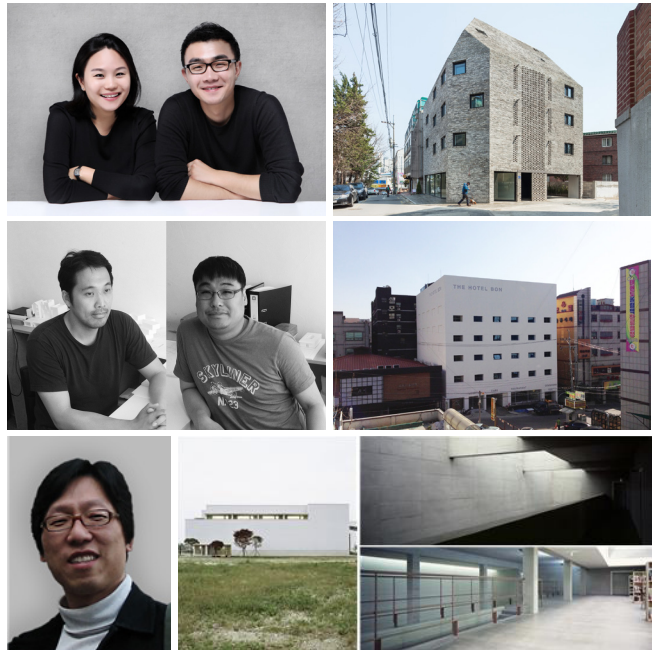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사)새건축사협의회, (사)한국건축가협회,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젊은 건축가 상’의 2014년도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올해는 총 18개 팀이 ‘젊은 건축가 상’에 지원하였으며, 1차 서류 심사, 2차 공개 시청각발표(프레젠테이션)를 거쳐 3팀(5명)의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수상자h	건축사사무소
곽상준 (34세), 이소정 (35세)	OBBA 건축사사무소
김민석 (37세), 박현진 (37세)	노션 아키텍처
김수영 (43세)	건축사사무소 숭비

올해의 ‘젊은 건축가 상’은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완성도, 건축과 사회에 대한 사고, 조직과 작업 방식, 변화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 등, 건축가로서의 기본 역량과 잠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젊은 건축가 상’은 문체부가 2008년부터 우수한 신진 건축가를 발굴, 양성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젊은 건축가’로 선정된 건축가에게는 작품 전시회, 작품집 발간, 국내외의 건축 행사 참여 등 다양한 기회가 제공된다.

수상자들은 오는 11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2014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 초대되어 작품 전시회를 갖고, 그 기간 동안 ‘작가와 의 대화’ 시간을 통해 건축 관계자 및 시민, 학생들과 함께 자신의 작업 내용 및 과정, 자신의 건축 철학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 곽상준, 이소정-내발산동 다세대, 김민석, 박현진-호텔 본, 김수영-FINELINK 사옥

2014.06.30.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주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공원 대상지 20개소 확정

생활공원 20개소 주민참여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녹색여가공간인 「생활공원」 대상지를 지자체들로부터 제안 받아 그 중 20개소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번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공원 또는 나대지로 서울, 경기도 등 11개 광역지자체별 20개소 278,122㎡이며,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전체사업비 중 70~90%까지 국비(50억 원)가 지원된다.

대상지는 경기도가 부천시 2개소 등 4개소로 가장 많았고, 인천광역시도 장고개공원 등 3개소가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서울·대구·울산·전남도가 각 2개소씩, 부산·광주·충북·충남·경남도가 각 1개소씩 선정되었다.

특히, 일방적인 관 주도 조성사업이 아닌 주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원사랑모임 등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이 새롭게 시도될 예정이다.

우선, 설계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조성과정에서는 내 나무·내 꽃 심기 등 참여행사, 준공이후에는 가칭 ‘생활공원사랑모임’ 구성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8월말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설계과정을 완료하고, 이르면 연말까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20개소 모두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2014.06.01.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서울시, 8천 가구에 설치될 미니태양광 모듈 6종 선정

큰 비용 부담 없이 시민이 친환경에너지 생산 주체로 참여하는 기회 기대

서울시가 베란다 등 일반 가정집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의 대표 모델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제품은 지난 5월 15일 미니태양광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에 참여하여 서울시 보급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다.

선정된 미니태양광은 모듈 정격용량이 200~260W이며 설치가격은 65만~68만원으로 제시되었으며, 설치 후 5년 무상 A/S 및 사고 당 1억 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제품이다.

미니태양광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6월 20일(금)까지 각 자치구 환경과에 신청하면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선정된 6개 제품 중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면 7월부터 원하는 제품을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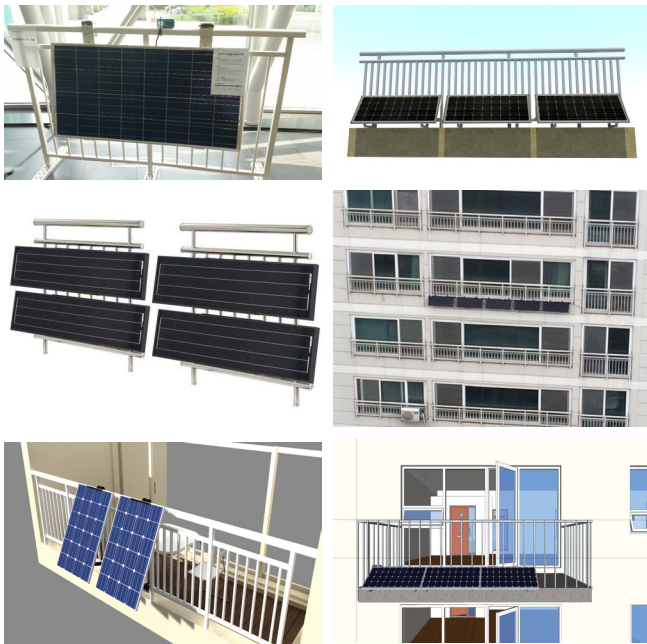
미니태양광은 서울지역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공동주택은 1개 단지에서 30가구 이상 단체로 제출하거나 에너지 자립마을 등은 우선 선정 대상이 된다. 또한 일반 개인 신청자도 전체 8,000개 중 5% 이내, 예코마일리지 가입자 등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이번 지원 대상 미니태양광은 공인 성능검사기관과 설비인증기관의 검사를 통과한 것은 물론 난간 거치대는 풍속에 대한 내풍압 시험을 거쳐 구조안전 진단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들로만 공급된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공동주택 동 및 단지별 1개 기업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이 큰 비용 부담 없이 신재생에너지 생산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 제품 사진(5개 기업, 6개 제품)

2014.06.08.

.....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환경부, 친환경 인테리어 주거 공간 만들기 지원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 20개 친환경 인테리어
전문 업체 선정해 시범 사업 개시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국민의 생활공간을 친환경
으로 개선하기 위한 인테리어 지원 사업을 9일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친환경 인테

리어 전문 업체 20곳과 9일 서울 은평구 여성정책연구원 국제 회
의장에서 발대식을 갖는다.

인테리어 전문 업체 20곳은 친환경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과 사업 의
지가 높은 업체 가운데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친환경 건축 자재를 이용하여 아토피피부염 등
의 환경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업체를 지원하며,
인테리어 업체가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범사업은 우선적으로 수도권(서울 9곳, 인천 5곳, 경기도 6곳)
에서 시작되며 향후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선정된 친환경 인테리어 전문 업체들에게 친
환경 자재 유통시스템 제공, 사업장 시설 개선,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한화L&C, 삼화페인트, 벽산, 동화마루, 에텐바이오벽지 등 24
개에 이르는 환경마크 인증 건축 자재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인테리
어 전문 업체에게 친환경 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홍동곤 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중소
인테리어 업체의 경쟁력을 높여 골목상권 활성화와 친환경 소비
문화가 국민의 생활 속에 자리 잡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09.

.....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환경산업기술원

‘2014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작품 공모

패시브디자인·재생에너지 활용 등
온실가스 최소화 건축물 대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는 녹색건축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우수 녹색건축물을 발굴·시상하는 「2014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이하 녹색건축대전)을 개최하고 참여 작품을 공모한다.

올해 녹색건축대전은 국건위가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녹색건축 관련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로서,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패시브디자인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여 준공된 건축물(리모델링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작품접수는 6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받는다.

녹색건축대전에 참여한 작품 심사결과 우수한 사례에 대한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회(10.29일), 전시회(10.29~11.1일, 4일간) 등은 「2014 대한민국 녹색건축한마당」 행사와 연계되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시상식 행사에서는 국건위 위원장상 1점(대상, 상금 500만 원)과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3점(최우수상, 상금 각 300만 원), 후원 기관장상 7점(우수상, 상금 각 100만 원)을 각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사, 건축주에게 수여할 계획이다.

국건위 관계자는 “이번 녹색건축대전은 환경을 생각하고 인간을 위하는 녹색건축 기술의 현재와 앞으로 추진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녹색건축한마당 행사와 연계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녹색건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4.06.22.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⁴ 건축물 내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열(Heating and Cooling)과 빛, 통풍 및 환기 등 자연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건축 재료와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화석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하는 건축 디자인 방법

동남아 해외건설 수주, '시장별 맞춤형' 새 전략 하반기 동남아시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본격 활동 나서

국토교통부 김경식 차관은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6일간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을 방문하여 해외건설·인프라 분야 주요 장관 등 발주처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우리기업의 동남아시아 해외건설 진출기반을 넓히는 수주지원 활동에 나선다.

그간의 해외건설 텃밭이었던 중동 및 플랜트 분야를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13년 중동을 추월한 아시아 시장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기존의 개발유망국가 위주의 아시아시장 수주지원과 달리, 아시아시장을 자체발주가 가능한 선진시장(싱가포르, 홍콩)과 개발유망시장(필리핀)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진출 전략을 시행한다.

(싱가포르) 도심지하철 공사(144억 불), 항만건설공사(13억 불) 등 주요 프로젝트 발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타깃형 수주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14.3월 서승환 장관의 말레이시아 수주지원활동과 연계하여,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고속철도 사업을 우리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그간 쌓아온 고속철도 시공 및 차량, 운영기술 등을 패키지 홍보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통부, 육상교통청과 고위급 면담을 가진다.

(홍콩) 인구 과밀·증가, 대지부족으로 인프라 확충 및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홍콩의 한정된 건설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양국 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홍콩은 인프라 개발에 매년 10조 원 이상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어, 공사 규모나 재원 확보력에서 매력적인 선진 시장으로, 이번 방문에서 도로부, 지하철공사와 고위급 면담



을 추진하여 우리기업의 진출방안을 모색한다.

(필리핀) 교통인프라, 방재, 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프로젝트 참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에너지부, 교통통신부, 공공사업도로부, 주택도시개발위원회와 고위급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13년 필리핀 남부지역을 강타한 태풍피해로 인해 시설기준이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로 전환되는 시기에 있어, 기술협력을 통한 시장 선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 인구조집중에 따른 교통 혼잡과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기술협력을 실시하기 위한 첫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유망시장과 선진시장은 서로 그 특성이 달라 진출 전략을 달리해야하며, 개발유망시장의 가능성과 선진시장의 안정성의 적정한 균형을 통해 상호보완적으로 우리기업의 진출기반을 다변화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시장에 대하여 “개발유망시장은 다양한 건설·인프라 수요가 있는 반면, 재원확보가 어렵고 사업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정책금융지원으로 재원마련을 돕고 시장개척자금지원사업 등으로 사업 발굴 및 현지 수주교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선진시장은 자체 재원조달은 가능한 반면, 공간, 시공조건 등이 한정된 건설여건을 극복해야하므로,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보다 많이 알리고, 더욱 높은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수주지원단 방문 성과를 이어가기 위하여, 메가프로젝트 발주 및 수주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번에 논의된 양국 간 협력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국토부는 우리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해 보다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수주지원활동을 펼치고, 하반기 개최될 대규모 해외 발주처 초청행사인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2014, 9.17.~9.19.)를 통해 국내에서도 발주처-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4.06.29.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민자 공원 개발, 쉽고 빠르게 추진 「도시공원부지 개발특례에 관한 지침」 시행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특례 제도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지자체가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면 그 인센티브로서 공원부지의 20%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다.

현재 공원부지에서의 수익사업 면적을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발의(6.23.) 되어 있으며, 지침에는 민간이 공원을 조성할 때 개발사업의 수익실현 시기가 늦고 사업 확정까지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제안서류 비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모제를 추가 도입하였다.

지침 개정으로, 민자공원 사업을 검토 중이나 복잡한 절차와 늦은 수익실현 시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일부 지자체(수원시, 의정부시, 원주시)에서 사업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되는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조성과 수익사업 동시 시행 허용

(현행) 민간사업자가 수익사업으로 분양 건축물을 추진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 전에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

(개정) 수익사업의 완료(사용검사, 사용승인 또는 준공) 전에 조



성된 공원을 기부채납

이 조치로 인해 분양 건축물인 경우 공원의 기부채납 전에 분양이 가능하여 시행자의 사업기간이 1년~2년 정도 단축되면서 재원부담 또한 많이 경감될 것으로 본다.

② 민자공원 특례제도 절차 간소화 등

(현행) 민자공원 조성시 관련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 8회 실시

(개정)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 3회로 단축

또한, 현행 공원조성계획 결정 이전에 하는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 체결과 사업 시행자 지정을 앞으로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이후에 하는 것으로 개선하며,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에게 공원조성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동시에 재원조달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제안서 제출서류 간소화

(현행) 민간이 공원조성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감정평가서와 기본설계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개정) 감정평가서 생략, 기본설계도는 기본구상도로 대체

이 조치로 인해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이 제출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④ 공모제 도입

(현행) 민간이 공원조성안을 작성하여 민간공원 사업을 제안

(개정) 해당 지자체에서 미리 대상공원을 선정한 후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 사업자를 선정 가능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6.29.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대전시, '경관상세계획 수립기준' 완화 시행한다

사업비는 절감, 기능은 향상... 저층건물 밀집지역
범위(800→200m) 완화 등

대전시는 3대 하천 주변(300m 이내)과 고도 70m이상인 지역에 대해 지역 특성 및 입지여건에 따라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설계자가 자율적으로 건물 형태를 계획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에 따른 불편 사항이나 개선 요구 등 민원이 많았던 과도한 규제 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하고 30일 발령했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의 핵심을 행정 절차를 간소하면서도 사업비는 절감하고 기능은 향상할 수 있도록 개정 방향을 설정하고, 우선 대전지역 저층건물 밀집지역의 범위를 축소했으며, 도시계획 관련 각종 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신설하는 등 규제와 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대전시 건축사협회, 경관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 자문과 5개 구청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게 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사업대상지 주변 800m이내 저층건물 밀집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10층 이하로 규제하던 '저층건물 밀집지역 범위'를 200m 이내로 대폭 완화했다.

또한, 작은 변경사항 처리만 있어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제외대상'을 신설하고, 설계자가 주변여건 및 경관을 고려해 자유로운 형

태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형태 규정도 완화하였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됨으로써 3대 하천변 및 표고 70m 이상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 활발해져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무호 대전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그동안의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 맞춰 개정 시행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6.01.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

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건축허가로 가능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 이외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은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본 기준을 완화하였다.

또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의 일환으로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원활한 정비와 이를 통한 임



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의 경우, 수요자가 유사하여 맞춤형 공급(수요자 우선 또는 분할 모집)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련의 주택건설기준 및 분양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5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완화하였다.

②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였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개정 이후 새로이 분양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도 적용됨에 따라, 약 5만 5천 세대('13.6월 이후~'14.6월 공포일 이전에 분양된 주택)가 전매제한기간 완화 규정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공급 및 거래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주택건설·공급 부문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6.03.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주택정책과

연천 옥계마을, 6월부터 생활환경복지마을로 조성 마을닭장, 농산물판매장 등 설치, 관광객과 주민소득 함께 향상시킨다

경기도 연천군 옥계마을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2014 생활환경복지 마을로 선정돼 6월부터 마을 조성사업에 들어간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생활환경복지 마을 신청을 한 연천, 안성, 양평, 파주 등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지평가를 실시한 결과 연천군 군남면 옥계 3리 옥계마을을 생활환경복지마을로 최종 선정했다.

경기도 생활환경복지마을 사업은 생활환경여건이 열악하고 신도시에 비해 비교적 낙후된 마을에 마을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공모, 지원하는 주민주도 마을개선사업으로, 지난 2012년 안성 두루나눔마을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안성과 안산, 안양에서 추진됐었다.

옥계마을은 DMZ라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마을주민이 민통선 안에서 콩, 울무 농사로 생활하며 생활환경이 열악한 반면, 개발이 제한된 관계로 자연생태가 잘 보전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환경부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추진 중인 곳이기도 하며, 멸종위기종으로 알려진 두루미가 매년 10월 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월동기를 보내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낙후된 지역을 환경·에너지, 복지, 일자리(소득창출)가 결합된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도의 사업 취지와 옥계마을 주민들의 희망사업이 일치해 생활환경복지마을로 선정했다.”며 선정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민통선으로 가는 출입로인 소리개 고개를 아트로드로 조성하고, 농가 곳곳에 방치된 폐농기계를 수거하여 두루미조형물을 제작하는 등 마을경관 개선과 관광객 볼거리 제공 등으로 추진된다.



또한 마을 닭장을 설치해 가구별 음식물쓰레기를 닭 모이로 주고 생산된 유정란은 홀로 사는 노인 가구에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관광객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로 사갈 수 있는 농산물판매장 설치, 두루미 탐방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마을회관, 노인회관, 저소득층 에너지개선(LED) 등,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저탄소에너지 사업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연천군 옥계마을이 주민이 행복하고 만족한 환경복지 마을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마을 닭장은 옥계마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결과에 따라 경기도 전역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제로 전파할 계획이다.

2014.06.03.

..... 경기도 환경정책과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시설 증설 가능해져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7.21.까지 입법예고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일부터 40일간(기간 6.9.~7.21.) 입법예고 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현장간담회, 지자체정책협의회,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검토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설비 증설 또는 근로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되던 건폐율까지 기존 부지 내 증축이 허용되고,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축제한(용도, 건폐율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어촌의 취락이 밀집된 지역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 일반 병원 외에 요양병원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하면 지을 수 있게 되어 농어촌 주민의 의료복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전체 면적의 10~2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4.06.08.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정비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본격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등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정비를 유도하고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단취락 해제지역 정비 촉진)

①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선택 다양화



기존 시가지나 주요 거점시설(공항, 항만, 철도역)과 연결하여 상업·공업기능 등 토지이용수요가 있는 해제취락은 토지이용수요에 적합한 용도지역(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허용되어, 이에 따라 주거위주의 개발만 가능했던 해제취락에 판매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도지역 변경 대상 제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 △지가 급등 및 투기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②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규모 조정

해제취락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실제 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로 조정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낮추고 취락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며, 특히 해제취락 주변에 녹지, 공원 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 취락 내 공원·녹지를 축소하거나 폐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 관련 규제완화)

① 사업시행자 부담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이상 공급해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이상 매각이 안되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일반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공원녹지(공공녹지)를 조성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② 민간의 해제지역 개발사업 참여 유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의 출자비를 제한을 2/3미만으로 완화하며(2015년까지 한함),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개별법에 근거한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하여 맞춤형 용지조성, 공사기간 단축 등을 원하는 민간의 참여도 확대한다.

③ 해제지역 개발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등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에 시장·군수가 해제 당시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없이 국토교통부(또는 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일원화하여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생략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제를 결정하도록 하여 절차를 단축한다.

아울러 소규모 도로(8~15m: 2차로)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자투리 토지의 활용도를 높인다.

정부는 규제 완화에 따라 해제 후 미착공 사업 등 약 12.4km²의 개발사업(여의도 면적의 4.3배)이 촉진되어 사업 지연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이 중 80%(약 10km²)가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지방에 위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06.10.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0개 도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한다

국토부, 도시방재 전문가 컨설팅 사업 지자체 선정

10개 지자체에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도시의 재해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지역별 재해위험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대책 등을 수립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10년('99~'08년) 간 재해피해가 과거 10년('89~'98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재해피해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도시방재 전문가들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재해위험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도시를 계획·개발한 것을 그 주요원인으로 지적해왔으며, 상습침수지역에 반지하 주택을 건설하거나, 전기·가스시설 등 위험시설을 설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통해 재해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도시의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는 재해 취약성분석 제도를 도입하고 재해취약지역을 방재지구로 의무 지정하여 집중관리토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경험에 없는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지원하고자 도시방재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기획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5월 9일부터 2주간 공모를 실시하고 지난 10년간의 재해피해, 지자체 의지, 도시규모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선정 위원회 평가를 거쳐 10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 지자체 선정 결과

구분	컨설팅 대상 지자체
선도지자체(3)	군산시, 원주시, 창원시
공모지자체(7)	공주시, 보령시, 안동시, 인천광역시, 정선군, 청주시, 홍천군

선정된 지자체에는 전문가 자문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특성을 분석하고,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차원의 방재대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의 체계적인 기술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선도지자체로 지정된 군산·창원·원주에는 전담팀을 배치하여 집중적인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재해안전도시' 성공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설명회 및 사례 발표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공유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 관계자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은 도시차원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재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방재대책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사업효과를 모니터링하여 내년부터 대상 지자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6.12.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민영주택 소형주택 건설·공급 자율화

6. 13일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시행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⁵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6.13일 개정·고시,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하였다.

⁵ 민영주택: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 제외)



②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용 제한 완화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 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개정·고시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6.12.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행복도시 건축물 품격 높인다... 상업용지에 국내최초 BA제도 도입

행복도시, 상업용지 BA(Block Architect, 블록건축가)제도
시범 도입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해 국내 최초로 상업용지 공급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BA(Block Architect, 블록(단지)건축가)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토지공급방식의 다양화 방안으로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설계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정한 블록건축가의 자문을 반영토록 하는 BA제도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복도시 상업시설은 △입면계획 △재료·색채 범위 △저층부 권장용도 등 특화요소 선정을 통한 블록별 건축디자인을 자문 받게 된다.

상업용지의 블록별로 LH가 블록건축가를 지정하면 BA는 사전에 건축물 품격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토지소유자는 이를 반영해 건축물 설계착수 전과 기본설계 시, 건축심의 전 등 총 3회를 기본으로 자문을 받는다.

이 같은 BA자문 토지매각방식은 이달 공급예정인 행복도시 2-4 생활권(나성동)과 3-1생활권(대평동) 상업용지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점차 확대될 방침이다.

앞서 행복청과 LH는 공동주택 품격향상을 위해 2-2생활권 공동주택용지를 설계공모방식으로 매각했다.

또,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주변 상업용 건축물 품질제고를 위해 1-5생활권 방축천 주변 상업용지(7필지)를 사업제안공모방식으로 매각을 결정하고 관련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상석 행복청 도시발전정책과장은 “행복도시는 그동안 설계공모와 사업제안공모방식 등 토지공급을 다양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BA자문 토지공급방식 도입으로 행복도시를 차별화된 친환경 명품디자인 도시로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1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발전정책과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도시재생 롤 모델로 정착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도시재생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부산시는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4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그동안의 성과를 총정리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투입예산은 총 486억 원(국비 21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억, 시비 460억, 구비 5억)이며, 단위사업 수는 139개에 이르며, 주요성과로는 △주거생활환경개선 △마을공동체 회복 △산복도로 관광명소화 및 문화재생 △골목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제고 △부산형 도시재생모델 정착 등이 손꼽힌다.

특히 도로개설 8개소(총 연장 486m), 보도정비 11개소(총 연장 9.28km), 계단 정비 28개소, 주차장 358면 등 도시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확충했고, 스토리텔링형 공간 8개소, 예술·창작공간 18개소, 우물터 복원 등 지역자산 특화시설 6개소를 포함해 총 32개소의 문화 및 관광인프라가 구축됐다. 더불어 33개의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졌으며, 프로젝트에 참여한 마을계획가·마을활동가는 53명에 이른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발전계획에는 △정책방향으로 주체는 주민 참여형→주민주도형 △재원은 시비 중심 추진→안정적 재원확보 △내용은 물리적 시설공급→주민자립관리 △방식은 행정지원 중심→민·관·산·학 지원 △홍보는 언론홍보→국제적 인증 추진 전환이 담겨 있다.

분야별 추진과제로는 △국비확보로 재원을 다양화하고, 중장기적 사업추진 여건을 조성해 안정적 사업추진 도모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해 국비매칭 사업으로 전환, 2016년부터 한해 2개 구역 사업 시행 △역사, 문화, 예술, 경관, 스토리텔링 마을 등 테마가 있는 마을 조성을 확대해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 추진 △마을만들기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으로 민·관·학이 협력해 마을자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미취업자, 은퇴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가 연계한 마을지원단 운영활성화로 함께 만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구현 △미취업 청년 등 구직자 대상 도시재생인력 양성을 확대해 신규 일자리 창출 △내국인 도시민박 운용 정책지원으로 주민주도 공동체 사업 지원 △산복도로 관광활성화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 상품화 지원 △산복도로 르네상스 성과를 전 세계와 공유하

고 부산 산복도로를 도시재생의 메카로 국제사회에 홍보하기 위해 국제평가 인증을 추진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도시재생의 새 지평을 열었다면, 남은 사업기간 동안은 본 프로젝트를 더욱 진화, 발전시켜 전 세계의 대표 도시재생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4.06.12.

.....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당정협의 개최

새누리당과 정부는 6월 13일 10시부터 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새누리당 측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 부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 측에서는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하였다.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및 3월 5일 발표한 「보완조치」 중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에 대한 보완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분리과세 적용 대상 완화)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로 정하였으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주택 수 관계없이 2천만 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논의하였다.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수입만 기준으로 하여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하며, 1주택자(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보유)는 현재와 같이 임대소득을 계속 비과세 적용한다.



(비과세기간 연장) 분리과세 이전에 소규모 임대소득자(2천만 원)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기간을 2년('14년, '15년)에서 3년('14년 ~'16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전세 과세) 전세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임대소득 과세가 정상화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경감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연간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72백만 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므로 건강보험료의 변동이 없다.

세부 사항은 '14년 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하고,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6월 11일 새누리당이 주최한 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당 정책위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정부 측에 제시하여 이날 당정 간에 합의된 것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4.06.13.

..... 기재부 소득세제과, 국토부 주택정책과, 복지부 보험정책과

포천 등 5개 시·군 생활권 선도사업 국비 137억 원 확보

경기도 평택시와 안성시의 '평안 해오름길 조성사업'과 포천시와 연천군의 'DMZ 사과 명품화 단지조성 사업', 의정부시의 '중랑천 녹색문화벨트조성사업'이 국비지원을 받게 됐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

품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4년 생활권 선도사업' 공모 결과, 경기도내 5개 시군이 제출한 3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37억 원을 확보했다.

생활권 선도사업은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핵심기조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확산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계·협력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전국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었다.

경기도는 그동안 생활권 선도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수시로 해당 시·군을 방문,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발굴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정부지원 예산대비 무려 600%이상 증가한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평안 해오름길 조성사업'은 평택시의 문화·복지 생활공간과 안성시의 녹지·여가공간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해오름길 방문자센터' 등을 신규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DMZ사과 명품화 단지 조성사업'은 포천시와 연천군이 한탄강을 수계로 이웃한 강원도 철원군과 협력을 통해 과수산업의 현대화와 통합브랜드를 출범시키는 내용으로, 특성화된 사과재배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다변화와 이를 활용한 관광산업, 관련 제품 판매도 기대할 수 있다.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은 경기도 의정부시와 서울 노원, 성북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인위적인 행정경계로 관리가 어려웠던 중랑천에 대한 협업관리를 통해 수도권 동북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족적 기반강화'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사업이 수도권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의 발표는 매우 고무적"이라며 "수도권과 함께하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기조변화에 발맞춰,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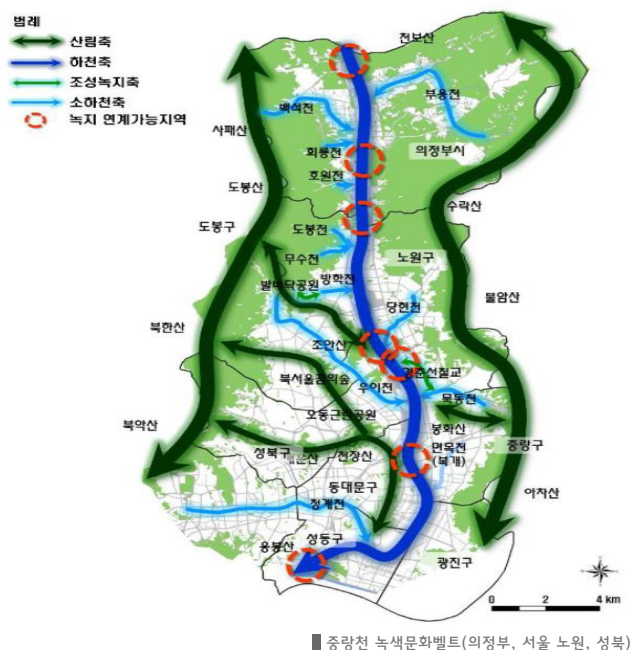
이번 선정된 사업은 도비 5억 원과 시비 5억 원 등 총 10억 원을 투자하여 춘천 도심지에 위치한 명동거리를 이전의 단순한 '겨울 연가' 촬영 배경지 또는 출연배우 등의 논리 마케팅에서 벗어나 예술, 패션, 음식, 지역경제성 등의 다양한 문화를 융합한 새로운 한류문화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춘천은 이전의 한류 트렌드의 명맥을 이어감과 동시에 새로운 한류의 메카로서 이미지를 확고히 하게 될 것이며, 한류와 예술, 쇼핑문화가 어우러지는 강원도 최초의 문화 복합거리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은 5개 시·군에서 응모하였고, 민간전문가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 심사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1개 사업을 선정했다.

심사평가위원회는 대상지역 선정 적정성, 실행가능성, 지역의 문화적·자연적 환경과 조화, 사업계획의 창의·독창성과 주민합의 및 참여도, 사후관리대책, 전문가 활용여부 등을 심사 평가하였다.

강원도는 사업 대상자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출 받아 7월 중 보조금 5억 원을 교부하고, 10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금년 말 착공하여 2015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 **종량천 녹색문화벨트**(의정부, 서울 노원, 성북)

2014.06.18.

경기도 창조행정담당관실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본격 추진
춘천 명동 한류문화거리 조성사업 선정

강원도는 2014년 「강원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대상으로 춘천시가 신청한 ‘춘천 명동 한류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최종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을 통해 친환경적 지역명소, 지역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유희공간 활용, 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장애 없는 가로환경 조성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 등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 제공과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등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2014.06.17.

..... 강원도 지역도시과

경남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본격 추진

경남도 5개 사업 선정, 사업별로 3년간 국비 60억 원 이내 지원

경남도는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4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5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지역 간 연계협력 촉진을 통해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뒷받침을 주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남도에서 선정된 5개 사업은 거창·함양·산청의 '하늘·땅·사람이 풍요로운 경남인력 지원센터 설치운영', 통영·고성의 '나전칠기 연계육성사업', 김해·양산의 '폐기물 매립시설 공동이용', 부산·김해·양산·울주의 'W-line 프로젝트', 울산·양산·밀양의 '영남알프스 Mountain Top' 사업이다.

선정된 사업은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하며, 3년간 최대 60억 원 이내에서 국비가 지원(보조율 80%)되고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이 우대 적용된다.

경남도는 이번 선도사업 외에도 생활권 사업으로 하동·산청의 '산청 따라 하동길 조성사업', 합천의 '한국천하명당 십승지 친환경농산 공동마케팅 및 HistoryTour', '세계문화유산의 얼이 깃든

팔만대장경 이운 순례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 권현균 균형발전단장은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된 지역행복생활권을 기반으로,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해 생활권 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특화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생활권 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06.19.

..... 경상남도 균형발전단

난지물재생센터 '19년까지 주민 친화공간으로 탈바꿈

서울시가 그동안 주민 기피시설로만 여겨졌던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을 위해 '19년까지 5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 친화적 시설로 만들어간다.

난지물재생센터는 '86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슬러지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들이 가동되어 왔으나, 지역에선 악취 등의 이유로 기피시설로 여겨져 왔다.

시는 난지물재생센터가 지역의 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계별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우선 '19년까지 악취저감, 문화·체육시설 등 공간 활용도를 높여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1단계 단기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 7월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공사 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환경개선 사업에서는 악취 문제해결이 가장 우선시 됐다. 센터 내 악취발생원에 대한 농도측정 및 전수조사를 실시해 개선사항을 도출했으며, 악취덮개 설치, 탈취기 신설 등 악취발생원



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아울러 센터 내 212천㎡의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 스포츠 시설 등 주민친화시설 공간으로 재구성해 인근지역 주민들이 시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축구장과 풋살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작물농원, 수생식물원, 어린이 체험농원 등 힐링존을 운영하며, 지역주민들을 위한 캠핑장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19년까지 단기계획이 완료되면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을 지하화 하는 중기계획과 수처리시설 복개 공원화 등의 장기계획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기피시설로만 여겨졌던 하수처리장을 체육·문화·여가 생활 등 주민친화공간으로 재 탄생시켜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감도

2014.06.30.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지역발전위, 2014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울산, '영남알프스 Mountain Top 사업' 선정돼

‘영남알프스 Mountain Top 사업’이 2014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과 관련, 총 53개 생활권에서 118건의 사업을 신청 받아 최종 36건을 선정했으며, 울산은 ‘영남알프스 Mountain Top 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울산시가 주관도시로 경주시, 밀양시, 양산시가 연계하여 추진되며, 사업기간은 2014년 ~ 2016년 3년간이고, 주요 사업은 영남알프스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운영, 영남알프스 통합안내체계 구축, 생태 힐링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 상품 개발 등이다.

한편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은 지역 간 연계 협력 촉진을 통해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뒷받침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14.06.18.

..... 울산광역시 기획관실

마을만들기 사업, 지역주민의 전문성 높인다

전문가 컨설팅 및 마을별 워크숍 등 주민역량강화지원

제주자치도는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속 가능한 마을발전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마을이장, 사무장 등 마을만들기 리더 및 주민들에 대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마을수요조사를 통해서 마을별 워크숍, 중앙 교육, 읍면동 순회설명회, 전문가 자문 및 교육과



정 진단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정례적인 주민교육과 마을별로 워크숍 등을 통해서 대화기법, 회의진행 기법, 사업계획서 작성 등 마을사업 추진에 필요한 역량을 전문가 컨설팅, 특강, 토론 등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관계자는 “연말까지 마을 단위 워크숍, 읍면동 순회설명회, 중앙교육 지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15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6.20.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농촌 도시 원하는 일자리 연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

충북도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가 공모한 2014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6개 사업이 선정되어 6월 18일 서울 코리어나호텔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갖고, 6월 23일에는 내 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2014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도내 3건, 도 외 3건 등 총 6개 사업 254억 원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시작된 지역행복 생활권사업의 첫 번째 가시적 성과이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은, 청주 중추도시권(청주, 청원, 진천, 괴 산, 증평, 보은)은 ‘청주 중추도시권 일자리 중심 허브센터 운영’ 사업으로 시·군간 일자리 정보 공유와 권역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해 구인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와 구직자가 모두 만족하는 취업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북부 도농연계생활권(단양, 제천)은 안전한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농번기 농촌인력의 효율적인 공급 등을 위한 ‘도·농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부 농어촌생활권(증평, 청원, 진천, 괴산, 음성)은 올해 4월 1일 개관한 증평군립도서관을 행복학습 거점센터로 증평은 물론 진 천, 괴산, 음성, 청원군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복학습공 동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증평군립도서관을 활용한 행복학습 공동체 운영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외 사업으로는 대전시와 보은군, 옥천군이 공동 추진하는 ‘대청 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 김천시와 영동군이 공동 추진하는 ‘삼도봉 생산 임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영주시와 단양 군이 공동 추진하는 ‘백두대간 영서 에코힐링 벨트화 사업’을 추 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23일에는 사업계획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심도 있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앞으로,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7월 중 중앙부처와 협의하 여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 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선정으로 일자리 정보 제 공 및 학습공동체 운영 등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 수요에 부합되 는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의 행복 체 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6.26.

..... 충청북도 공보관

도시계획 변경제한 폐지된다 개발사업시 도로확보 기준도 대폭 완화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5년)은 폐 지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0일부터 20일간(6.20.~7.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

(현행)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후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개발사업 지연, 적정용도로 사용 곤란

(개정)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 가능

② 진입도로와 구역 내 도로 확보 기준 완화

(진입도로) 구역면적의 규모에 따라 8m ~ 15m까지 차등 확보 → 최소 8m이상의 폭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

(구역 내 도로) 유형별로 6m ~ 8m 확보 → 당해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성 검토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기타도로 12m 이상 → 진입도로 폭 이상

이렇게 제도를 개선할 경우 도로확보기준을 지역실정 및 개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도로확보 비용이 크게 감소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을 확대, 완충녹지의 의무설치 기준을 임의기준으로 개선,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도 간소화

(도로법상 접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 가능

이렇게 되면 최소부지기준(3만㎡)을 충족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

을 수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감소하고, 접도구역부지를 녹지용지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간선도로변 완충녹지) 의무적으로 설치 → 완충녹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할 경우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무사항 → 필요한 경우에만 자문

이러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4.06.17.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수요자 중심의 행복주택 건설 기준’ 마련된다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녹지기준을 마련하고, 공공택지지구(구 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시장가격으로 현실화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적인 행복주택 건설기준 마련

(주차장)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은 관계법령의 50/10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차수요가 적고, 45㎡ 미만의 소형으로 건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공원·녹지)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



택의 공원·녹지는 50/10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이를 공원·녹지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인구지표) 행복주택의 인구계획기준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 중심의 행복주택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여 적절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② 공공주택지구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

그간 공공택지구 내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에 근거하여 공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되, 공공분양용지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할 계획이다.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경직적 가격체제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분양주택이 입지여건, 수요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기타 공공주택 건설관련 제도보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노인가구등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유형을 영구임대주택(50년) 및 국민임대주택(30년)과 같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한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이상 장애인으로만 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지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8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6.19.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주민이 만들어가는 어촌마을 창조이야기 제주 귀덕2리 마을 등 전국 10개 어촌마을 역량강화 사업 실시

해양수산부는 전국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어촌마을의 자원발굴과 공동체 형성, 마을 특화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어촌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어촌의 고유자원인 수산물과 갯벌, 어촌경관 등을 활용하여 어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다.

금년에는 어촌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 4월 마을 주민이 작성한 공모신청서와 현장평가를 토대로 지역주민과 리더의지, 마을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주도 귀덕2리 마을을 비롯한 10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14년도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은 마을발전 예비계획 수립 등 이론교육을 바탕으로 우수마을 견학과 마을 경관개선 실습 등의 현장교육 등 마을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본 사업을 통해 어촌주민주도로 다양한 마을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마을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해 어촌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2014.06.22.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7월부터 '어린이집 등 기부하면 용적률 완화' 본격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



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 받는다.

이는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3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사업자는 기부한 시설 면적 외에 그만큼 건물을 더 지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6.24.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충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입주자가 알도록 표시 의무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6.24. 통과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충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6.24.)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06년부터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다가, '13.2.23.부터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주택법」에서 근거 조문이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되며,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 06. 24.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국토부,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공모에 나선다

올해 11월까지 6개소 선정 추진

국토교통부는 6월 27일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공모를 시작하고, 7월 3일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 위주로 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 등에 조성하는 복합산업단지(산업+지원+주거기능)로, 전국에 12개가 지정(8개 조성 중, 4개 운영 중)되어 있으나 전체 산단의 0.2%(2.4km²) 수준에 불과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3.9.25.)을 통해 '15년까지 9개소('14년 3개소, '15년 6개소)를 국가가 직접 개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1차 사업지구는 지난 3월에 인천, 대구, 광주광역시 3개 지역을 선정('14.3.12.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하였고, 현재 LH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1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고, 이번 공모 대상은 2차 사업지구로서 최대 6개소를 선정하게 된다.

공모는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3개소까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자체가 사업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국토부·LH·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 심사, 산업입지정책심의회(기재·산업·환경부 국장급 등)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는 첨단산업단지로서의 개발 컨셉을 감안하여 첨단산업 수요, 입지여건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으로, 우선,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 첨단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체, 인력 확보여건 등을 평가하여 첨단산업 입지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접근성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선정되도록 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지원시설, 공유지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도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공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여 LH공사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LH 단독 시행 외에 민간기업이나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제안을 우대함으로써 사업방식도 다각화할 예정이다.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GB해제 용지 활용, 기반시설 우선 지원,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되며, 도시 첨단산업단지에는 복합용지(산업+상업+주거 등),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및 녹지율 완화, 산업시설용지 내 연구·교육시설 입주 허용 등 각

종 규제완화 조치들이 대폭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 사업지구 공모를 통해 첨단산업 수요에 적합한 입지와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어 첨단산업 육성과 투자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4.06.26.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공간정보산업 선도할 핵심인재’ 키운다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11개 지정, 특성화고 3개 선정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인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11개를 지정하고 특성화고 3개를 선정했으며 앞으로 5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성화대학원은 IT, 문화, 에너지 등 사회 각 분야를 공간정보와 융복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유도할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특성화고등학교는 공간정보산업 현장에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가공할 인적자원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DB/SW 기술 교육 중심의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특성화대학원은 '14.5.30.~6.13.까지 모집기간 동안 전국 12개 대학교가 응모하였으며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구성된 공간정보 핵심인재 양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강원대, 강릉원주대, 경북대, 남서울대, 동의대, 부경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안양대, 이화여대, 충남대가 지정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5.30.~6.13.까지 모집 기간 동안 11개 고등학교가 응모하였고, 시·도 교육청의 사업계획서 검토와 「공간정보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사업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구성된 공간정보 특성화고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울디지털고등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울산경영정보고등학교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에는 재학 중(1학기 생에 한함)이거나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 중에서 연구계획서의 심사를 거쳐 장학생이 선발되면 1인당 연간 약 1200만 원의 지원금을 학생과 학교에 지원할 예정이고,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에는 교육인프라 구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전문교원 연수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당 연간 약 1억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ICT, 모바일 등 첨단 기술과 공간정보를 융·복합하는 국민행복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새로운 공간정보 융복합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나라 공간정보 산업의 기초체력이 증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6.29.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

20호 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받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6월 30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국가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하며, 귀환 국군포로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4년 6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확대

(현행)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리츠·부동산펀드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으나 활용사례 미미

(개선)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 이외에도 20호 이상 임대사업자 추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우선공급 기준을 조례 제·개정 절차 없이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모집공고 승인 시 청약률 등 지역여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공급 물량 제한 가능하며, 우선공급 받은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공공성 확보

②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현행) ‘공공임대리츠’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주체이나, 시장 등의 입주자모집 승인이 필요해 사업지연 우려

(개선) ‘공공임대리츠’도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기대효과) 공공임대리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10년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충

③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특례 신설

(현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3.6.23.)으로 귀환 국군포로 주거지원의 일반적 근거 마련

(개선) 무주택자인 귀환 국군포로에게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국민주택 등(임대주택에 한함)의 특별공급을 허용

주택 유형별로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을 감안하여 위로지원금 등으로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례 마련



④ 한부모가족 등의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

(현행)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자격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어 한부모가족도 독립세대임을 전제로 세대주임을 요하며, 한부모가족으로서 형제자매 등의 집에 동거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노부모(65세 이상) 부양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세대주 배우자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제외.

(개선)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시 세대주 요건 배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도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현행) 청약자격을 위반하여 당첨된 자가 소명기간에 부적격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당첨취소이외에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당첨자로 관리 또는 1~2년간 청약 제한

(개선) 부적격 당첨자에 대하여는 당첨을 취소하되, 당첨일 부터 3개월 청약제한만으로 한정하여,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게 되어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통장 효력이 유지되어 가입기간·납입횟수·저축총액에 따른 청약순위·순차 유지 가능

2014.06.29.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거복지기획과

광주 도심 재생 활력 붙는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신규사업 6건 선정... 국비 106억 원
지원받아

광주광역시와 국토교통부의 2015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신규사업 6건이 선정돼 도심 재생이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도시활력증진지역 신규사업을 신청하고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사업 6건이 선정돼 5년간 국비 106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도시활력증진지역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동구 학운2구역, 서구 마북동구역, 광산구 도산7통구역 등 주거지재생 3건 △남구 송화마을, 북구 도동고개 풍물마을 등 중심시가지재생 2건 △광산 더하기지구 사업 등 지역역량강화 1건은 2015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210억 원(국 106억, 지 105억)이 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월말에는 옛 전남도청 앞 주변지역(충장동, 동명동, 산수1동, 지산1동)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앞으로 5년간 국비 100억 원이 이 지역에 투자될 전망이어서 향후 도시재생 사업추진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특·광역시, 시·군·구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도시활력 증진지역 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의 50%를 국가예산으로 보조하는 사업이다. 주거지재생, 중심시가지재생,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의 사업 분야로 분류돼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활력증진지역 신규사업이 추진되면 침체된 광주도심을 살리는 데 활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기획재정부 정부예산안 최종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4.06.30.

.....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전북도, 공모사업으로 국비 425억 원 확보

방사선 융합 기술 등 미래 산업 탄력전망

전라북도는 '14년도 6월중 중앙공모사업 대응결과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정읍, 130억 원),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익산, 정읍 등 5개 사업 116.3억 원),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전북대, 40억 원) 선정되어 국비 42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 인해 '14년도 6월까지 전라북도의 중앙공모사업 선정 실적은 총 76개 사업에 국비 1,853억 원에 이르며, 이는 중앙공모사업의 규모가 전년도부터 축소 기조임을 감안하면 도, 시군, 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신속한 동향 파악 및 발 빠른 대응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주요 공모선정 사업을 살펴보면, 미래부의 '다목적 전자선 실증센터' 유치로 국비 13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센터는 방사선 융합 원천기술의 개발성장을 바탕으로 시제품 제작·가공·조립·성능 시험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해 방사선 제품의 신뢰성과 질적 성능을 검증하는 곳으로, 이로 인해 방사선 핵심기술의 조기 산업화가 가능해 방사선 산업체의 제품·가격에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위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 사업'은 새로운 유형의 주민체감형 창조적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5건의 선도사업이 선정되어 금년부터 3년간 국비 116억 원을 지원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선도 지역별 핵심역량 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의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에 전북대가 선정되어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이는 대학 내에 중소기업 기업 부설 연구소를 집적화 하여 대학의 연구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 사업이다.

한편, 6월 말 기준 금년도 공모사업의 총규모는 추가 발굴 노력 등을 통해 124개 사업 3,279억 원으로, 연초 89개 사업 1,973억 원 대비 36개 사업 1,306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파악된다.

앞으로도 전라북도는 실국별로 7월 중 중앙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신규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 정보수집·동향파악 강화 등은 물론, 공모 선정률 제고를 위해 사업별 선정 전망 분석과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등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14.06.30.

..... 전라북도 정책기획관실

부산시민공원(구 캠프 하야리아)



■ 약 40,000㎡ 규모의 잔디광장



■ 재활용된 캠프 하야리아의 망루

2014년 5월 1일 옛 하야리아 부대 자리가 부산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해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부산시민공원의 개장은 도심 속에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없는 부산에 처음 생긴 대규모 평지공원이며, 도시공원이라는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휴식공간은 물론 역사문화 활동이 가능한 공원이라는 점과 개발압력을 시민이 지켜낸 점, 부산 서면 한 복판에 조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부산시민공원 터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위락시설인 경마장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일제 강점기 말기에는 일본군 기마부대와 임시군속훈련소 등 군용지로 사용된 바 있다. 1945년 광복 후에는 주한 미군기지사령부로 사용됐고, 1948년 미 영사관과 유엔 산하기구가 잠시 자리를 대신했다가 1950년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다시 주한미군 부산기지사령부가 설치되면서, 2006년 캠프가 폐쇄될 때까지 주한 미군 물자와 무기보급기지 역할을 하는 캠프 하야리아(Hialeah)라는 이름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 부지의 주권을 회복하고 공원으로 조성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1990년대 ‘우리땅 하야리아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하야리아 반환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부대 주위를 둘러싸는 ‘인간띠 잇기 대회’ 등 다양한 반환운동이 추진되었다. 또한, 73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하야리아 부지 시민공원화추진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정부와 미군측에 부지 반환을 압박하기도 하였다.

이후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부산이 확정되자 시당국은 이 부지를 선수촌 건립을 위해 30~40%만 공원으로 조성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시민사회는 더 넓은 공원을 요구하였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부지매각 방침’을 표명하였다. 이전적지 전체를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해야 했고, 이를 위해 시당국이 2004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노력을 하였지만 국방부의 완강한 부결로 난항을 겪었다. 이후 부산시는 여러 차례의 협상 끝에 전체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부지전체가 공원으로 결정되었지만 공원조성 예산을 확보해야 했다. 시민사회는 무상양여를 원했으나 정부는 무상양여 불가를 표명했다. 시민사회는 하야리아부지 무상양여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2005년 2~8월 사이 부산시민 절반에 해당하는 152만 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부산시는 부산시민 정서를 재정경제부에 전달하는 등 끈질긴 노력으로 정부로부터 조성비용의 70% 지원을 약속받았다.

2006년에는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공원 조성을 위해 세계적인 조경가 제임스 코너(미국, 필드 오퍼레이션)에게 설계를 의뢰하였지만 제임스 코너가 구상한 계획안은 마권판매소 건물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장소성과 역사성이 남아있지 않은 계획안이었다. 이 구상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시민의견 반영, 역사성보전 등을 강하게 요청하면서 계획안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부지의 토양오염에 대해 완전복구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설계안을 바꾸려는 운동이 이루어졌다. 지역언론과 전문가로 구성된 '하야리아공원포럼'은 수차례 걸친 포럼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안의 변경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언론은 하야리아 기획시리즈를 보도하고 포럼에서 논의된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는 곧 지역사회의 새로운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 제임스 코너를 통하여 실시설계 보

완용역이 이루어졌다.

보완된 실시설계는 부지의 역사성과 보존 건축물을 반영하고 경마 트랙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존을 형성, 마권 발매소, 극장, 사령관 숙소, 위관급 관사, 하사관 숙소 등 건축물 보존하였다. 풍경이 좋은 가로수길, 경마트랙, 헬기장, 전봇대 등을 보존하여 부지의 역사성을 최대한 살렸다. 부지내 수목은 대부분 공원 조성에 재활용하고 시민들이 기부한 수목 4만 6629그루로 '참여의 숲'을 조성하였다.

부산시민공원의 조성과정은 도심 군부대 이전부지에 다른 용도가 아닌 공원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시민운동의 결과이다. 이제 시민모두가 공원의 주인으로서 선진 공원문화 정착을 이루어나야 할 때이다.

글·사진▷이유리(부산의 꿈: 캠프 하야리아의 시민공원 만들기, 미세움, 2012 참고)



■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일제강점기에는 마권 발매소로 미국 주둔 시절에는 캠프 하야리아의 장교 클럽으로 사용된 건축물



■ 문화예술존
작가공방 및 전시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하사관 관사



■ 기억의 기둥
미군 부대 내 목재 전신주를 활용한 조형 열주



■ 부산의 역사를 담은 역사의 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도시 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 건축자산 DB를 구축·서비스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건축 서비스산업 육성 등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31-90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동 706-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B 706-1, 230 Simin-dae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431-908, Korea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